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을 미리 본다

# 2024 김종규 OX 파이널 선행정학



## 2024 김중규 OX 파이널 선행정학을 펴내며

시험 한달 정도 남겨두고 마지막에 뭘 봐야할까? 참 애매합니다. 기본서를 보자니 엄두가 안나 눈에 안들어오고, 기출집만 보자니 정답이 외워져있고, 요약서만 보자니 넘 익숙해져 있고...ㅠㅠ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될 예상 지문들에 대하여 OX로 진위를 가려보는 형식의 마무리는 어떨까요? 이런 고민 위에서 만들어진 요약집이 바로 OX파이널 선행정학입니다.

이번 2024 OX파이널 선행정학은 시험장에서 보게 될 예상지문을 빈출기출지문 뿐 아니라 신경향 예상지문까지 포함하여 모두 (OX + 숫자)제를 엄선·수록하였습니다. 단원별로 꼭 알아야 하거나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들만 선별하여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교재로, 이 지문이 왜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이라면 어떤 단어를 바꿔서 출제했는지를 빠르게 체크해나가면서 본인의 약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마무리교재입니다.

이번 2024 OX 파이널 선행정학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이미 출간되어 수험생 여러분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2024 여다나압축 선행정학과 함께 보완재로 볼 수 있도록 판형의 크기와 주제별 배열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다나압축과 함께 보시거나 여다나압축으로 핵심이론을 정리하고 나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차원에서 OX 지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확인한다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둘째, 해설을 틀린 지문 바로잡기 부분과 보충 설명 부분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틀린 지문을 바로 잡아 설명하고, 맞는 지문이라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지문은 별색 작은 침삭글씨체로 설명을 간략하게 보충하였습니다.

셋째, 단순히 OX 지문 정리가 아니라 파이널 단계까지 와서도 아직 전반적인 정리가 안되어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행정학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도록 지문과 연관되거나 비교되는 개념들을 초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정리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2023년도에 새롭게 선보인 신경향지문이나 출제경향, 법령개정내용(「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머리말

다섯째, 9/7급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나 7급 기출지문들도 9급 고득점차원에서 중요한 지문들은 수록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꼭 알아야 할 숫자 150제를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매 시험마다 두 세 문제는 숫자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숫자부분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별히 지문간 간격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해설부분에 관련 이론의 핵심을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정리하여 해설·정리만으로도 관련 이론을 한번 더 최종정리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 출간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2024 여다나압축 선행정학과 함께 이 책을 보신다면 더 없이 좋은 파이널 엔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1~2월 OX파이널 특강(주1회)시에 주요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2%가 부족하여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합격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엄연하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시험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2024 OX 파이널 선행정학이 수험생 여러분의 마지막 열정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12. 5. 김중규

## 합격생 추천의 글

## 선행정학 풀커리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 여다나와 파이널 OX

저는 선행정학 풀커리를 따라가면서 이해 기반의 수업과 적절한 수험범위 설정으로 안정감 있게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지는 행정학 시험에서 이해 하지 못한 채 단순암기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방대한 행정학 특성상 중규쌤이 적절한 수험범위를 설정해주시는 것도 수험생활의 불안함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행정학의 모든 교재가 훌륭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다나와 파이널 ox 교재를 시험직전까지 계속 회독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다나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여다나는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내용 없이 모든 게 담겨있어 본인이 헛갈리는 선지만 추가적으로 가필한다면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파이널 ox는 기출문제집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선지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출 요약집의 느낌입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밀도가 매우 높고 중요한 선지라 마무리 단계에서 행정학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다나 파이널 ox 교재 강추합니다!!

- 2023 국가7급 합격 주요석 -

## 기출에만 익숙해진 내용을 OX지문으로 최종 마무리

사실 시험 막바지에 가면 기출문제집이나 요약서의 내용이 익숙해져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OX문제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OX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틀린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까지도 옆에 설명과 맞춰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다나 요약서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복습하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기출회독으로 정답이 외워져버렸다면 OX파이널을 통해 마무리 공부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3 국가7급 합격 노성근 -

## 합격생 추천의 글

## 실전에서 판단력과 순발력을 길러주는 교재

기출회독을 반복하다보면 문제와 답이 익숙해져서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걱정과 의구심이 들 때 OX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객관식 기출을 공부할 때에는 전 지문을 다 알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풀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OX 지문으로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공부가 가능했고, 판단력과 순발력을 길러 시험장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21 국가9급, 지방9급 최종합격 김민지 -

## 정확성에 이어 속도까지 제패

그동안 성실하게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카스파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쯤 이론적 감각은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간 '정확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이론 및 기출 내용을 학습해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OX교재를 통해 '정확성'과 함께 '속도'까지도 제패하게 된다면 행정학은 여러분에게 있어 합격의 지름길이자 인도자로서 소중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자신있게 강추합니다..^^

- 2022 국가7급, 서울7급 최종합격 박주은 -

## 2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로서의 행정 A

☆ 01 요금제를 시장에 맡기면 자연독점 문제로 실패한다.

☆ 02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이다.

03 공유재를 시장에 맡기면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문제가 생긴다.

04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 이하 또는 이상으로 공급된다.

☆ 05 의료, 교육 등 가치재는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사적재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 06 공유재는 비용은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집중되어 크게 느껴져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07 E.Ostrom은 정부규제 등 보편적 방식으로는 공유재의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 08 공유재는 무임승차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

☆ 09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유재, 국공립공원 등 공공시설은 유료재에 해당한다.

10 공기는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11 기상예보는 공공재, 한산한 고속도로는 유료재,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재, 의료는 시장재에 각각 해당한다.

☆ 12 무임승차의 근본원인으로 비배제성을 들 수 있다.

13 공유지 비극의 주된 원인은 비배제성 때문이다.

14 공유재는 민간부문이 관리·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

[모든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는 이유]

- 공공재 : 무임승차, 과다·과소공급 때문
- 요금제 : 자연독점 때문
- 공유재 : 과잉소비와 비용회피로 인한 비극 때문

□ .....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 □

□ 적정수준의 공급 X □

□ ..... 사적재이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

□ [비용 : 분산-작게 느껴짐] 편익 : 집중-크게 느껴짐] 압도 □

□ 세계 도처에서 구성원들간 자발적 합의(자치규약)에 의한 다양한 해결방식 발견(공유의 비극을 넘어) □

□ 공공재는 ..... □

□ ..... 유료재, ..... 공유재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전기·도로) : 유료재  
공공시설(국공립공원) : 공유재]

□ 공기 [공유재설 : 오염(비극)가능성  
공공재설 : 경합성 X, 배제성 X] □  
↳ 일반적

□ 비배제성 = 무임승차 □

□ ..... 비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이다. □

□ 공유재 : 민간단체 등이 관리·공급 가능  
재화공급자(원칙) [공공재 : 정부  
공유재 : 민간부문  
유료재 : 공기업  
사적재 : 시장] □

## 2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B

- ★ 01 진보주의 정부는 소외집단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 등 복지정책을 선호한다.
- ★ 02 진보주의는 자유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03 신자유주의는 진보주의에 입각한 큰 정부를 보수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로 변모시켰다.
- 04 진보주의 정부관은 조세감면 확대를 주장한다.
- 05 보수주의 정부는 선별적 복지와 교환적 정의를 중시한다.

[ 진보주의 : 복지정책 선호 ○  
보수주의 : 복지정책 선호 X

..... 인정한다.

[ 보수주의 : 자유시장 신뢰  
진보주의 : 자유시장 잠재력 인정



보수주의 정부관은 .....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인간	경제인 X	합리적 경제인
자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공평	결과의 공평	기회의 공평
정의	배분적 정의	교환적 정의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시장	잠재력 인정	신념 강함
재분배	선호	비선호

1 정부실패 A

01 정부실패는 정치인 등 수요측면과 공급재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 수요측면 : 국민, 정치인 등 심리적 요인  
공급측면 : 공공재의 구조적 요인

☆ 02 외부효과는 정부실패,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외부효과 : 시장실패 요인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실패의 요인

☆ 03 X의 비효율은 경쟁의 결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04 사적 목표의 설정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민영화가 있다.

사적 목표 설정(내부성) = 관료가 사적 이익 추구

☆ 05 민영화를 통하여 대응하기 힘든 정부실패의 유형에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있다.

파생적 외부효과 = (직접공급이 아닌) 규제나 유인이 초래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 → 보조삭감 또는 규제완화로 대응

06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이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성에 해당한다.

내부성 =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실패의 원인

07 정부실패 원인 중 '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 '권력의 편재'는 .....

☆ 08 사적 목표의 설정, 지대추구 등은 대표적인 정부실패 요인이다.

지대추구 : 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득 추구를 위한 로비활동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실패원인	대응		
	민영화	보조 X	규제 X
사적 목표	○		
X-비효율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13 행정의 분절화문제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분절화 [ NPM : 정책과 집행의 분리  
GOV : 집행통제의 곤란

★ 14 행정재정립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 재해석 : 비판적 해석  
행정재정립운동 : NPM에 대한 반론 - 거버넌스의 초석 - 정치행정이원론

15 거버넌스에서는 정부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 1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가 공통적으로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방향잡기] [노젓기]  
NPM : ○ ○(민영화)  
GOV : ○ △(공동생산)

17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만 모든 지역사회와 도시에 레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8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조정자로 본다.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급주체	시장	연계망
가치	결과(효율)	과정(민주)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	신뢰와 협력
서비스	민영화	공동생산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 15 탈신공공관리론 C

- ☆ 01 탈신공공관리론은 분절화의 축소와 합체적 (통)정부를 반대한다.
- 02 탈신공공관리론은 재규제, 재정치, 재집권을 중시한다.
- 03 탈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제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자율·분권을 강조한다.
- 04 시장메커니즘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베리 보우즈만(B.Bozeman)의 공공가치실패론은 공공가치관리론과 대조를 이룬다.
- ☆ 05 넛지(Nudge)는 디폴트 옵션 설정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 06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재창조보다 정부재발견을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
- 07 Moore의 공공가치 창출론은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 08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 ☆ 09 넛지이론의 토대가 된 행동경제학에서는 인지오류나 행동편향 등 외부효과에 의한 행동적 시장실패를 중시한다.

..... 지향한다.  
합체적 정부 = 결정 + 집행 → 분절화 X

.....  
[ NPM : 탈규제, 탈정치, 탈집권  
탈NPM : 재규제, 재정치, 재집권

..... 신공공관리론은 .....  
[ NPM : 경쟁과 분권  
탈NPM : 책임과 재집권

..... 공공가치관리론의 핵심이론이다.  
공공가치관리론- [ 공공가치실패론(B.Bozeman)  
공공가치창출론(Moore)

[정부역할-행정의 정당성 강조]  
[ 신행정론(1968)  
블랙스버그 선언(1985)  
행정재정립운동(1990)  
거버넌스론(1996)  
신공공서비스론(2000)  
공공가치관리론(2002)

.....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다.

.....

... 내부효과 .....

	신공공관리론	넛지이론
토대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부 역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실패	외부효과에 의한 전통적 시장실패	내부효과에 의한 행동적 시장실패
관료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책	경제적 인센티브	넛지(선택설계)
정부	기업형 정부	넛지 정부

**14** 분배정책이 불특정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이 비용부담자이고, 분배정책이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정책은 대통령 등 고위 엘리트나 중앙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배분정책 재분배정책] [재원] 공적재원 고소득층 소득 [주도자] 관료, 하위정부 대통령 등 엘리트

☆ **15** 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이다.

[강제성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직접성 ↑: 직접대부, 정부소비, 공적보험, 공공정보, 경제적 규제, 공기업  
\* 직접적 수단: 직접대부, 정부소비, 공공정보, 공기업, 경제규제

**16** Almond & Powell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다.

☆ **17** 농어민 피해지원,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18**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

**19**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으로 조세,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국기·국화의 제정, 국궐·동상 건립 등이 .....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상징: 동상, 국궐, 스포츠, 기념일, 축제 등  
추출: 징세, 징집, 토지수용, 세금모금 등  
분배: SOC(도로, 공원, 항만) 건설, 보조금 등  
규제: 진입, 가격, 안전, 환경규제 등

☆ **20**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재분배정책은 정책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화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 **21** 정책집행단계에서 규제대상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나타나는 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특성	루틴화	관계 안정성	반발·갈등	원만한 집행
유형					
분배정책	용이	높음	낮음	용이	원만한
경쟁규제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호규제	곤란	낮음	높은편	보통	보통
재분배정책	곤란	높음	높음	곤란	원만한

### 3 정책결정 이론모형 - 개인차원 A

- 01 정보의 부족과 집권적 구조는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
- ☆ 02 만족모형은 절대적 합리성에 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
  - 합리모형은 .....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 ☆ 03 점증모형은 목표수단분석 대신 참여와 합의를 중시한다. □
  - 합리모형 : 목표수단분석 O  
점증모형 : 목표수단분석 X
- ☆ 04 합리모형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하고 결정이 간결하다. □
  - 점증모형은 .....  
합리모형 : 복잡  
점증모형 : 간결
- ☆ 05 점증모형은 변화나 환경에의 적응력이 약하다. □
  - 점증모형 환경적응력이 약한 보수적인 모형
- ☆ 06 점증주의는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
  - 점증모형 : 동의와 합의 중시 (정치적 합리성)  
합리모형 : 분석과 계산 중시 (경제적 합리성)
- ☆ 07 최적모형은 직관 등 초합리성을 중시하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가치로 삼는다. □
  - 최적모형 - 경제적 합리성 : 기본  
초합리성 : 가미
- ☆ 08 혼합주사모형에서는 근본결정은 점증모형을, 세부결정은 합리모형을 전략적으로 절충한다. □
  - ..... 근본결정은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은 점증모형을 .....
- 09 혼합주사모형에서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에 입각하여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
  - [대안] [결과]  
근본결정 : 합리모형 - 모든 - 개략적  
세부결정 : 점증모형 - 한정 - 면밀히
- 10 경제인은 합리적·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감·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
  - ..... 행정인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경제인 : 합리모형  
행정인 : 만족모형(경제인의 종말)
- 11 합리모형은 현실적합성은 떨어지나 가치지향적 행동이 필요할 때 중요하다. □
- 12 점증모형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인정하므로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적 정책결정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
  - ..... 용이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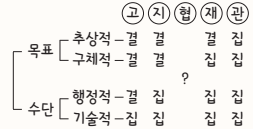
**23**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이다.

☆ **24** Nakamura & Smallwood의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25**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법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abatier & Mazmanian의 성공적 집행요건]

- 타당한 인과모형
- 명확한 정책지침
- 유능한 집행관료
- 관련집단의 지지
-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 분석할 수 없는 단점 .....

[하향식 집행의 장단점]

장점	단점
집행과정의 법제화	정책지자 입장만 중시
정책목표 중시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
객관적 정책평가	책임정치(by 선거) 구현 X
문제점 예견하여 지침화	의도치 않은 효과 분석 X
거시적 요인(정치·경제, 법 등) 고려	

☆ 13 사전측정에 친숙하게 되어 사후측정 값이 달라지는 것은 측정 요인 또는 검사요인(testing)에 해당하며 이는 '눈에 띄지 않는 관찰법'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



14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목표달성이 수단 실현에 선행해야 한다.



..... 수단실현이 목표달성에 선행 .....

☆ 15 평가의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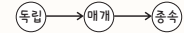


..... 필요조건이다.

16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결과가 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



☆ 17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18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외적 타당성이 저하된다.



..... 내적 타당성 ..... 측정도구요인 → 신뢰도 저하 → 내적타당도 저하

19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조절변수라고 한다.



- [제3의 변수]
- 선행변수 : 원인변수에 앞선 변수
  - 매개변수 : 원인의 결과이자 결과의 원인인 변수
  - 허위변수 : 없는데 있는 것 처럼
  - 혼란변수 : 일부 있는데 전부 있는 것 처럼
  - 억압변수 : 있는데 없는 것 처럼
  - 조절변수 : 인과관계의 강도(상호작용효과)에 영향
  - 왜곡변수 : 효과를 정반대로 만드는 변수

12 기능구조는 기계적 구조, 사업구조나 수평구조는 유기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 각각 사용된다.



★ 13 Mintzberg의 임시특별조직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는 지원스태프가 핵심역할을 한다.



..... 기본적인 과업흐름 밖에서 .....

14 T.Parsons에 따르면 적응기능은 경제적 조직, 목표달성기능은 정치조직이 각각 담당한다.



[기능]	[조직]	[예]
- 적응(A)	경제적	기업
- 목표달성(G)	정치조직	행정기관
- 통합(I)	통합조직	사법·경찰
- 유지(L)	유지조직	교회·학교

★ 15 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 조직에서의 핵심적인 조정메커니즘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16 Mintzberg의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운영계층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기계적 관료제]	[전문 관료제]	[사업 부제]
핵심	기술구조	운영계층	중간층
표준화	작업	기술	산출
환경	단순 안정	복잡 안정	단순 안정

17 Mintzberg의 단순구조는 권한이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권화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 18 Daft의 사업구조는 자기완결적 사업부서들로 구성되며 이들 사이의 업무조정은 매우 용이하다.



..... 용이하지 않다.

[Daft의 조직유형]

- 기계적 구조 : 분업, 계층제, 집권
- 기능구조 : 공동기능별로 편제
- 사업구조 : 산출(성과) 중심
- 매트릭스 : 기능구조 + 사업구조
- 수평구조 : 핵심업무과정의 팀제
- 네트워크 : 핵심역량 위주 조직
- 유기적 구조 : 학습조직

## 5 대표관료제 A

☆ 01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02 대표관료제는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03 적극적 대표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04 관료들의 책임과 신념은 매우 객관적이며 이는 정치적 사회화에 의하여 형성되고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고 가정한다.

☆ 05 대표관료제는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인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인사제도이다.

06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논란과 거버넌스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 07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능률성을 촉진시킨다.

08 대표관료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을 들 수 있다.

09 대표관료제는 Kingsley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Krantz는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할 것을, Ripper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10 관료 입직 이후의 재사회화는 대표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인다.

11 실적제는 능률성을, 엽관제는 민주성(대응성)을, 직업공무원제는 생애성을, 대표관료제는 대응성을 각각 중시한다.

..... 실적주의의 폐단을.....

.....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  
 대표관료제 { 내부통제 : 강화  
 외부통제 : 무력화

소극적 대표관 .....  
 { 소극적 대표 : 사회경제적 배경 반영(출신 → 태도)  
 적극적 대표 : 출신집단의 이익 반영(태도 → 정책)

..... 매우 주관적이며.....

..... 확립을 저해하는 인사제도.....

대표관료제 { 민주적 가치 주입 ○  
 협치, 국민주권주의 X

..... 저해한다.  
 실적 위주의 인사를 저해하므로

장점	단점
강력한 내부통제	실적제와 상충
관료제의 다양성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X
실질적 기회균등	재사회화 고려 X
민주적 가치 주입	역차별 논란
	외부통제 X

{ 미국 : AA(적극적 조치)  
 우리 : 균형인사정책(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 저소득층 할당제 등)

대표관료제 { Kingsley : 최초 주장  
 Krantz : 비례대표로까지 확대  
 Ripper : 사회적 가치도 포함

..... 저하시킬 수 있다.

	대응	책임	민주	능률	형평
엽관제 :	○	○	○	X	△
실적제 :	X	X	△	○	△
직업관료제 :	X	X	X	○	X
대표관료제 :	○	○	X	○	○



## 5 공무원노조 B

- 01 공무원단체는 관리층의 인사권을 확대시킨다. □ ..... 인사권을 제약한다.
- ☆ 02 5급 이상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2021.7.6. 「공무원노조법」 개정 시행)
- 03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에 포함  
은 시킬 수 있지만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04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
- 05 행정부의 정부 측 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 □
- 06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조설립신고수리 : 고용노동부장관  
노조전임동의 : 임용권자  
정부측 교섭대표 : 인사혁신처장
- 07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
- 08 일반직 및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 2019.12 법률 개정으로 경찰, 소방도 가입 가능  
2022.10. 법률 개정으로 가입가능 직급제한 폐지
- ☆ 09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 및 교육 공무원(교원 제외)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  
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2021.7.6. 시행)  
[총천] [개정]  
일반직 - 6급 이하 전직급  
특정직 - 6급 이하 상당 외무·소방·  
외무직만 교육(전직급)  
별정직 - 6급 이하 상당 전직급 상당  
퇴직자 - X O
- ☆ 10 현재 퇴직 공무원도 노조규약으로 정하는 자는 공무원 노조에 가  
입할 수 있다. □
- ☆ 11 교정·수사, 인사·보수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  
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 가입할 수 없다.
- 12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 [노조가입 제한]  
지휘·감독직  
교정·수사직  
인사·보수직

**13**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다.

...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나 둘 이상의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 설립은 불가능하지만 .....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2022.10.27)

[가입가능 직급 제한(6급 이하) 폐지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 **14** 경찰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불가능하나 소방은 가입가능하다.

[공무원 노조 & 직협 가입대상 비교]

구분	노조	직협
일반직	○	○
별정직	○	○
외무직	○	○
경찰직	×	○
소방직	○	○
교육직	○	×
퇴직자	○	×

★ **15** 근무시간면제자는 무급휴직인 노조전임자와 달리 휴직하지 않고 근무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무급]	[휴직]
노조전임자	○	○
근무시간면제자	×	×

(2023.12.11. 시행)

## 6 정부회계 A

- 01 현금주의는 현금의 출납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한다.
- ★ 02 발생주의에서 차입금의 감소나 비용의 증가는 대변에 기입한다.
- ★ 03 발생주의에서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
- ★ 04 현금주의에서는 주로 복식부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 ★ 05 발생주의에서는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재무정보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 ★ 06 자산 - 부채로 특정 시점에서의 순자산 크기를 알려주는 저량지표는 재정운영표이다.
- ★ 07 정부재무제표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현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고 있다.
- 08 자산이나 부채의 크기를 비망록의 형태로 알려주는 것은 발생주의에 해당한다.
- ★ 09 발생주의에서는 회계가 여럿일 때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예산순계개념을 사용하므로 회계 간 연계를 파악할 수 있다.
- 10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의 운영성과를 수익 - 비용 = 손익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이다.
- 11 수정발생주의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보고하는 방식으로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등에 유용한 제도이다.

현금주의 : 현금의 수입·지출 기준  
 발생주의 : 자산의 증감(거래의 발생) 기준

..... 차변에 기입한다.

자부순비수 - 플라마플마

복식	차변	대변	
발생			
자산	+	-	재정상태표
부채	-	+	
순자산	-	+	
비용	+	-	재정운영표
수익	-	+	

..... 가능하다.

발생주의 : 자산평가, 감가상각 등이 주관적  
 현금주의 : 객관적

발생주의에서는 .....

현금주의 : 단식부기 적용  
 발생주의 : 복식부기 적용

..... 발생한다.

..... 재정상태표이다.

재정상태표 : 자산 - 부채 = 순자산, 저량지표  
 재정운영표 : 비용 - 수익 = 운영결과, 유량지표

국가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지방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현금주의에 해당한다.

비망록 : 단순메모 O, 정식회계서류 X

발생주의 : 연결재무제표(회계간 연계 파악 O)  
 현금주의 : 분리재무제표(회계간 연계 파악 X)

..... 비용 - 수익 = 손익 .....

재정상태표 : 자산 - 부채 = 순자산  
 재정운영표 : 비용 - 수익 = 운영결과

채무부담주의는 .....

채무부담주의 : 지출원인행위 시점에 기록  
 수정발생주의 : 유동자원화 시점에 기록

###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C

- 01 역대 우리나라 행정개혁은 구조적 요인보다 인간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 ★ 02 김대중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 03 고위공무원단체도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되었다.
- 04 노무현 정부는 소방방재청 신설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았다.
- 05 김영삼 정부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였다.
- ★ 06 최근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물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 07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였다.
- 08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조직, 공기업 및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였다.
- 09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였다.
- ★ 10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 인간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 중앙인사위 : 1999 ~ 2008  
기획예산위 : 1998 ~ 1999



..... 노무현 정부 때 도입 .....  
고위공무원단체도 : 2006.7 도입



이명박 정부는 .....  
(이명박 : 통폐합의 달인)



[ 수량 : 국토부 ] -> 환경부로 일원화(2018)  
[ 수질 : 환경부 ]



복수차관 : 7개 부처  
■ 국문산기북(복수)과의



[역대 정부별 개혁의 특징]  
- 김대중 :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위  
- 노무현 : 부처통폐합 X, 정원 감축 X  
- 이명박 : 통폐합(For 선진화)  
- 박근혜 :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 문재인 :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 윤석열 :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B

- ★ 01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군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 02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03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 ★ 04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동시선거제가 도입되었다.
- ★ 05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신설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06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 ★ 07 현재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추진기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이다.
- 08 2006년 시·도 교육감 직선제 실시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 시·읍·면 자치제가 ..



반대이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성격	법정기구	임의기구
위촉권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주민대표성	↑	↓
위상	실질적 기구	단순자문기구
재원	자체재원	지원재원



★ 04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동시선거제가 도입되었다.



★ 05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신설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대통령을 의장으로 .....



- [박근혜 : 지방자치발전위
- 문재인 : 자치분권위
- 윤석열 : 지방시대위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 1949 : 시·읍·면 자치제(이승만)
- 1961 : 시·군 자치제
- 1991 : 지방의회 재구성(노태우)
- 1995 : 동시선거제(김영삼)
- 2006 : 시·도 교육감 직선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1 정부간 관계 C

- ☆ 01 Wright의 분리권위형은 정부가 인사·재정이 완전히 분리된 관계이다.
- ☆ 02 Wright에 따르면 정부 간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어디까지나 독립된 실체로 보는 모형은 포괄권위형이다.
- 03 콜리(Cooley) 독트린은 딜런의 법칙과는 달리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홈롤의 법칙과 연관된다.
- 04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을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 보는 것은 신우파론적 관점이다.
- 05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 ☆ 06 우리나라에서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분권화된 결과로 본다.
- ☆ 07 Wright는 분리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실천적 모형으로 본다.
- 08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론은 지방정부가 조직자원과 재정자원 측면에서 중앙정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 09 그린피스(J.A.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모형을 제시했다.
- ☆ 10 Wright의 대등권위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분리권위형 : 조정권위형, 완전 분리  
포괄권위형 : 상급정부에 예속  
중첩권위형 : 일부기능 공유, 협조 → 이상적

..... 중첩권위형이다.

[딜런의 법칙 : 주정부 위주(집권의 법칙)  
홈롤의 법칙 : 시정부 위주(콜리 독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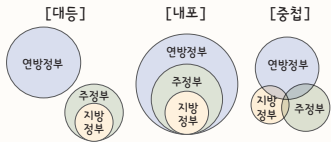
..... 다원주의 관점이다.  
신우파론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공공선택론 관점

..... 중앙정부가 .....  
[재분배정책 : 중앙정부  
배분정책 : 지방정부

[우리나라 = 대륙계 단체자치 : 전래권  
영미계 주민자치 : 고유권

Wright는 중첩권위형을 .....  
..... 조직자원과 정  
보자원 측면 .....  
[중앙 : 법적자원, 재정자원  
지방 : 정보자원, 조직자원

찬들러(Chandler)는 .....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등하지만, 지방정부는 주정  
부에 예속된 관계로 본다.



14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청원의 수리, 지방채 발행권 등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청원의 수리를, 단체장은 지방채 발행권 등을 가진다.  
 [의회 : 의결권, 조례제정, 감사·조사, 청원수리  
 단체장 : 규칙제정, 지방채발행, 재의요구, 선결처분, 임시회 소집요구]

☆ 15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다.

…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

16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원칙 : 기관대립형  
 예외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음.]

17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견제·균형 X → 민주화 X
행정의 안정성·효율성	책임소재 불명확
집행기구의 주민대표성	행정의 전문성 X

☆ 18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19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 20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1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 …

2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

23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 - 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 기관대립형이며 ………

24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있을 때 소속기관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  
 합의제 행정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님.

☆ 25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지방의회 정족수]  
 발의 : 단체장 또는 조례로 정한 지방의원 수  
 개의 : 재적 1/3 이상 출석  
 일반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특별 : 재의의결 : 재적과반출석, 출석 2/3 찬성  
 - 의원 제명, 자격상실 : 재적 2/3 찬성  
 - 의장 불신임 : 1/4 발의, 재적과반 찬성  
 - 소제변경 : 재적 과반 찬성

1 주민참여 B

- ★ 0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상 의무화되어 있다.
- ★ 02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소송제도보다 앞서 도입되었다.
- ★ 0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대상이 아니다.
- ★ 04 현재 우리나라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간접발안에 해당한다.
- ★ 05 19세 이상 주민은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06 감사청구된 사항은 9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 07 최근 중앙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 ★ 08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09 행정기구 설치·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 ★ 10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 11 주민조례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조건 및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 12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이 최근 공직선거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 「지방재정법」상 .....  
2011 「지방재정법」상 의무화
- .....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소환제도보다 .....  
주민소송 2006, 주민소환 2007
- 주민감사 { 수사·재판  
청구 X { 사생활  
감사할거나 감사중인 사항
- [ 직접발안 : 주민투표로 결정  
간접발안 : 지방의회가 결정
- ..... 18세 이상 ..... 지방의회에 .....  
[ 직접 발의 O  
직접발안 X  
간접발안 O
- ..... 60일 이내에 .....  
[ 주민참여예산 : 2011 의무화  
국민참여예산 : 2018 의무화(2019 예산부터 시행)
- ..... 200명을 넘지 않는 .....  
주민감사청구 { 시·도 : 300명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기타 시·군·구 : 150명
- 조례개폐 { 법령 위반  
청구 X { 지방세·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 ..... 3년 .....  
[ 선거연령 : 18세 이상(2020.1)  
주민감사청구 : 18세 이상(2022.1)  
주민조례청구 : 18세 이상(2022.1)  
주민투표청구 : 18세 이상(2022.4)  
주민소환청구 : 19세 이상





##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http://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3년 12월 8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